

2013. 11. 28. (목)

2012추15 판결 관련 보도자료

공보관(전화 : 3480-1451)

대법원(주심 이상훈)은 2013. 11. 28. **교육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I. 사안의 내용과 쟁점

■ 사안의 내용

- 원고: 교육부장관, 피고: 서울특별시의회
- 피고는 2011. 12. 19.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함)을 의결하여 같은 달 20.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송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는데,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012. 1. 9. 이 사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함
-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한 다음 2012. 1. 20. 재의요구를 철회하였음
-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같은 날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2. 1. 2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 5247호)를 공포함
-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고, 학교장의 학생지

도권한을 침해하며, 교육의 자주성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 26.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II. 판결 결과 및 판시 사항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 관계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취지와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취지 등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원고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고, 한편 원고의 재의요구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그 요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원고의 재의요구 요청기간은 교육감의 재의요구기간과 마찬가지로 시·도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가 시·도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기 위하여는 교육감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교육감이 원고의 재의요구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함(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라1 결정 참조).
- 비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1. 12. 20. 이 사건 조례안을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인 2012. 1. 9. 피고에게 재의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독립된 권한인 재의요구 요청을 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의 이송일부터 재의요구 요청기간인 2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1.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III. 이 판결의 의의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의 효력을 교육부장관이 소로써 다룰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판결임
 - 대법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임을 분명히 하였음
 - 이에 따라 (비록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였다가 철회하였더라도)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 요청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한 이상 교육부장관은 조례안에 대하여 직접 제소할 수 없다고 본 것임
- ☞ 참고로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라1 결정도 같은 취지임